

서울특별시의회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 한명희 의원 외 72명 발의 】

의안번호 1651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한명희 의원 외 72명
- 나. 제안일 : 2017. 2. 14.
- 다. 회부일 : 2017. 2.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결실물로 7개월 만에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로부터 거출 받은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감언이설과 회유를 자행하고, 또 피해자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강제적으로 수령할 것을 강요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함.
- 한편, 일본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출연했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한·일 관계에 지장이 되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협의 중단과 고위급 경제협정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화해·치유 재단'을 즉각 해체 시키고,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출연 받은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즉각 반환하며,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예산(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체와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한 책임있는 재협상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인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
-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음(참고자료1).
- 동 발표문에 따르면, 일본정부 대표 기시다 외무대신은 ① 아베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②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예산 거출 및 재단 설립,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및 상호 비난·비판 자제 입장을 표명하였고,
- 우리 정부 대표 윤병세 외교부장은 ① 일본 정부의 착실한 조치 실시를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②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한 해결 노력, ③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입장을 표명하였음.
- 또한 정부는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16년 7월 28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는 일본 정부의 자금출연이 완료되었고, 10월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급사업 등을 시행중에 있음(참고자료2).
- 이러한 한·일간 합의와 재단설립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¹⁾와는 달리 정부 간 합의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1) 정부는 금번 합의의 주요 성과로서 첫째,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후,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고, 둘째, 아베 총리가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공식

수렴이 부족했고, 위안부 피해자 중 일부가 여전히 합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일본 유력인사들의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어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합의가 부적절했다는 국민여론이 계속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 첫째, 협정문에 대한 국가 간 서명 등이 없이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발표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전쟁 기간 중 위안부라는 국제적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법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에서 그 법적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 둘째, 사죄의 내용이 ‘책임’이라고만 표현하여 법적 책임 인정에는 이르지 못하는 등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 셋째, 합의문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란 문구가 포함된 것이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넷째, 일본 정부의 출연금(10억엔) 성격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가 배상 또는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난 아시아여성기금의 경우와 유사한 지원금 개념에 불과하며,
 - 다섯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위안부 소녀상 이전 여부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입장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 재단’의 즉각적인 해산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종합 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그 일부가 여전히 합의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 이후에도 일본 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몰지각한 망언과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내용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본 결의안의 주장과 취지는 타당함.
-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일본정부의 행위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유지에 커다란 장애요소인 바, 이에 대해 동 결의안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하였으며, 셋째, 제도적인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에 의한 재단설립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밝히고 있음.

【참고자료1】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전문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1.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기시다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2. 먼저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외무대신께서 오늘 이 회담을 위해 방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4. 특히, 지난 11.2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님과 아베 총리께서 “금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후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해 왔습니다.
5. 어제 있었던 12차 국장급 협의를 포함하여 그간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오늘 기시다 외무대신과 전력을 다해 협의한 결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6. 우선,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기시다 외무대신께서 오늘 합의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밝히시고, 이어서 제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시다 대신 언급내용

먼저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여 윤병세 장관과 매우 중요한 일·한 외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합니다.

-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

는 조치를 강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에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7. 다음은 오늘 합의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아래를 표명한다.

-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8. 이상으로 한국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9.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대신과 함께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협상 타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0. 앞으로 금번 합의의 후속 조치들이 확실하게 이행되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 아울러 한·일 양국간 가장 어렵고 힘든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새해에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2. 감사합니다.

【참고자료2】 화해·치유 재단의 구성 및 현황

[화해·치유재단 출범]

□ 7.28 「화해·치유재단」 공식 출범

- 「재단설립 자문위원회」(1월 발족, 5차례 개최) → 「재단설립 준비위원회」(5.31 발족, 3차례 개최) → 「화해·치유재단」 출범(7.28)

※ 2017. 2월 현재 총 10차례 재단 이사회 개최

[화해·치유재단 개요]

□ 임원 구성

- (이사장) 재단설립 준비위원장인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
- (이사(9명))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진창수 세종연구원 소장,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이원덕 국민대 교수,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소장, △외교부 동북아국장(당연직), △여가부 권익증진국장(당연직)
- (고문) 유명환 前 외교통상부장관

□ 기본 골격

- (재단형태) 여성가족부 등록 비영리법인
- (기본재원) 사업비용은 日측 출연금에서 충당 / 행정비용은 정부 지원
- (재단 사업) 한일 양국 정부가 협의한 큰 틀의 범위 내 재단이 결정·실시
 - ※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관련 부분)
 -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
- (재단 존속기간) △피해자 의견, △재단설립 취지, △재단사업 진척 상황 등 감안하면서 재단에서 결정

[화해·치유재단 사업]

※ 4차례 한일 국장협의를(3.22, 4.20, 5.17, 8.9)를 거쳐, 재단 사업의 큰 틀에 대해 의견 일치

□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존자·사망자 모두 대상)
- (구체 사업) △개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
 - * 한국 정부 등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대리인 포함)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을 위한 현금지급 : 사망 피해자에 대해 2천만원 규모, 생존 피해자에 대해 1억원 규모
- 사업실시 방식
 - '15.12.28 한일 양국정부가 발표한 합의에 비추어 양국 정부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결정
 - 재단은 양국 정부에 대해 사업의 실시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보

□ 사업 실시

- (사업 공고) 재단 개별피해자 대상 사업(현금지급) 신청 공고(10.11)
- (사업 개시) 6차 재단 이사회(10.14)에서 현금지급 사업 개시 결정